

공 개

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27 호 |
| 보 고 연 월 일 | 2021. 7. 21. (제 14 차) |

보
고
사
항

「금융지주회사법」 상
공동출자법인 관련 해석기준 보고

금융위원회회의 안전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위원장 은 성 수 |
| 제출 연월일 | 2021. 7. 21. |

1. 보고주문

「금융지주회사법상 공동출자법인 관련 해석기준 및 운영절차」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.

2. 보고이유

「금융지주회사법」상 “공동출자법인”에 대한 세부기준 관련규정의 부재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의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가 불명확하여 해석기준 및 실무 운영절차 수립 필요

3. 주요골자

가. 공동출자법인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

- (경영상 영향력) 상호 대등한 수준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함
- (지분양도 제한성)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 양도가 제한되며, 위반시 페널티 부과 등 지분양도가 어려워야 함

나. 향후 실무 운영절차

- 향후 공동출자법인 관련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, 타법 및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신규설립 및 전환 두 가지 사례로 나누어 처리절차 운용
- 상기 절차에 따라 판단된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는 신청대상에게 공문으로 통보

다. 향후 추진계획

-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*

* 현재 운영중인 「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TF」(‘21.6월~) 추진과제에 포함하여 하반기 중 입법화 준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금융지주회사법상 공동출자법인 관련 해석기준 및 운영절차

1. 제도 개요 및 검토배경

- (개요) 금융지주회사(자회사)는 자회사(손자회사) 지분의 50% 이상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, “공동출자법인”으로 인정되는 경우 30%이상만 소유하는 구조도 허용* (자회사 지분소유원칙의 예외)

* 2009.4월 법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을 통해 출자한 경우 주식소유기준을 50%에서 30%로 완화(法§43의2①)

- (정의) 공동출자법인*이란, “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등의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여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”으로 규정

* 공정거래법에서도 일반지주회사에 대해 공동출자법인 관련 동일하게 규정

- 다만, 하위규정에서는 ‘상당한 지분,’ ‘지분양도의 현저한 제한’ 등 공동출자법인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 未규율

* 공동출자법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(法§43의2④), 시행령에서는 관련조문 未규정

- (입법취지) 공정거래법에 既반영된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금융회사 M&A와 해외진출 활성화 도모 취지

- 공정위는 “다수 사업자가 참여하는 물류, 항만 등 사업에서 지주회사(자회사)는 자회사(손자회사)에 대한 주식소유 의무를 준수하기 곤란하다는 형식적 측면을 감안”하여 기준 완화(‘04년)

- (연혁적 배경) ‘09년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공동출자법인 조항이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동 조항의 적용사례는 없는 상황

- 다만, 최근 금융지주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대응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관련하여, 금융지주회사들의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관심 제고

※ 관련 조문

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(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) ①금융지주회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회사의 주식을 해당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[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인 경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(이하 이 조에서 “공동출자법인”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, 이하 이 조에서 “주식소유기준”이라 한다] 이상 소유하여야 한다. (생략)

④ 제1항의 공동출자법인의 세부기준, 제2항의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및 제3항의 주식소유기준의 완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3(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) 제43조의2(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.

2. 공동출자법인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

- (기준 필요성) 공동출자법인에 추상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,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필요
 -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('15.11월)하여 운영중

※ (참고)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에 대한 해석기준

① (공동출자자 요건)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

-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지분율, 임원선임권, 주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결권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
- 상당한 지분은 공동출자자간 지분율이 동일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대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유하면 족함

② (지분양도제한 요건)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울 것

- ‘지분양도를 현저히 제한’에 대해 지분양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, 주주간계약이나 정관에서 주주들의 양도금지의무 부과, 양도금지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또는 위약벌을 부과하는 경우 지분양도 제한요건 충족

< 별 지 >

□ (요건) 공동출자법인의 법적 정의에 비추어, ①경영상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②지분양도 제한성 두 가지를 심사

① (경영상 영향력) 상호 대등한 수준의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2인 이상의 출자자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

- 경영상 영향력은 주요 출자자들 간 △상호 대등한 수준의 상당한 지분비율*, △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과 의결권, △임원 선·해임 및 성과평가·보수지급 관련 권한, △최고경영자 자격 등 경영승계 관련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* (예) 다수 출자자의 지분율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, 특정 출자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분비율을 보유하여 사실상 단독으로 지배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불허

-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어야 하며,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는 1인으로 간주*

* 심사 당시 사실관계와 달리 추후 특수관계 등이 발견될 경우 공동출자법인 지위 즉시 무효

※ 공동출자법인으로 인정가능한 케이스

* A사는 금융지주 자회사(손자회사), B, C, D사는 기타 출자자 상정

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√ (예1) | A사 49%, B사 51% | 이사 지명권한 및 임원 선임권한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수준 |
| √ (예2) | A사 40%, B사 40%, C사 20% | A사와 B사는 각각 단독 의사결정권한은 없으며, B사와 C사 간 특수관계도 없음 |
| √ (예3) | A사 35%, B사 45%, D사 30% | A사가 B사보다 지분율은 낮으나,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 의장 선임권한이 있으며, 이사회도 3사가 대등하게 구성 |

② (지분양도 제한성)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출자지분 양도가 제한되며, 위반시 페널티 부과 등 지분양도가 어려움을 입증

- 기본적으로 모든 지분변동에 대해 금융당국의 사전 검토·再심사 필요

* 당초 공동출자법인으로 인정되는 지분에서 사실관계가 달라지므로, 지분 변동시마다 공동출자법인 지위 인정여부에 대한 당국의 새로운 해석 필요

< 별 지 >

- 특히, 제3자(신규)에 지분 매각시 이사회 사전승인 또는 특별 결의, 채권자 등의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 마련 필요
- 관련절차 위반으로 지분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과 가능한 페널티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

※ 공동출자법인으로 인정가능한 케이스

| | |
|--------|---|
| √ (예1) | - 주주간 계약에 콜옵션 행사는 금융당국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성이 명시 |
| √ (예2) | - 외국 관련법령 및 하위규정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지분양도는 지분양도제한 의무위반임이 명시 |
| √ (예3) | - 계약서 상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지분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위약금 부과, 계약해지, 해당 양수도 무효 등의 페널티가 명시 |

3. 향후 운영절차

- 향후 공동출자법인 관련 금융당국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, 타법 및 유사 사례를 참조하여 다음 두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처리절차 운용

- ① (신규설립) 2인 이상 출자자 공동으로 출자하는 법인을 금융지주 자회사(손자회사)로 신규 편입하는 경우, 통상 자회사 신규편입 절차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금융위 승인대상(예외적으로 신고 허용)으로 처리

* 금융지주회사법 §16조(승인), §18조(신고)에 따른 절차 진행

- ② (전환) 既편입된 자회사(손자회사)를 공동출자법인으로 전환시, 공정위 사례 등*을 준용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전결사항으로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 검토

* 공정위는 사무처에서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를 검토하되, 협약내용 또는 지분 관계 변동시 공정위에 신고하여 다시 심사받을 것을 명시

- 상기 절차에 따라 판단된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는 신청대상에게 공문으로 통보

- 공동출자법인 해당여부 결과 통보시, 협약내용 또는 지분관계 변동시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것을 명시

4. 향후 추진계획

-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* (위임근거규정 있으나 하위규정 불비)

* 현재 운영중인 「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TF」(21.6월~) 추진과제에 포함하여 하반기 중 입법화 준비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금융위원회 | 금융감독원 |
| 소관부서 | 금융정책과 | 금융그룹감독실 |
| 연 락 처 | 02-2100-2833 | 02-3145-8211 |